

사설

무전공 확대 바람, 학교는 대비됐나

“무전공 선발 비율 목표를 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물려설 수 없는 원칙.”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월에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렇게 못 박았다. 무전공 입학은 이제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인다. 우리학교도 ‘무전공 선발’이라는 바람을 피하지 못할 듯하다.

학문과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전공 간 벽을 허물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역효과를 우려하는 입장도 대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전공 선발이 소위 ‘취업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인기 학과로의 쏠림 현상과 순수 학문의 침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첨예한 찬반 의견은 차치하고, 과연 우리학교가 무전공 선발로 들어온 학생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췄는지 묻는다면 ‘그렇다’는 대

답이 쉽사리 나오지 않는다.

문제는 우선 무전공 입학생을 위한 부족한 교육 환경이라는 기본 지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당장 무전공 입학생의 행정 처리는 어디서 이뤄져야 하는가 기준이 불분명하다.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면 무전공 입학생을 위한 학내 공간 확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학교는 고질적인 공간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그 어느 건물도 여유 공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무전공 입학생의 공간 배정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수 인력 총원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무전공 입학생의 등장으로 수업이 늘어나면 강의실 수도 늘어나야 하고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 인원도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2023학년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는 27.11명으로,

서울권 7개 주요 대학(고려대,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과 비교했을 때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교수 인원 확충이 어려워 분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강사로만 수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자유로운 학문과 진로 탐색’이라는 무전공 선발의 취지를 충족시킬 교육 체계와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지 점검도 필요하다. 최근 종로학원에서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채 입학한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일반 학과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생활 부적응, 원하는 학과 탈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2018년도부터 무전공 선발을 실시해 온 타 대학은 각종 멘토

링, 전공설명회, 지도교수와 함께 하는 분반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 전공 탐색을 돕기 위함이다. 우리도 ‘탈전공’의 취지에 걸맞은 탄탄한 교육 인프라와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현재 대학가가 우려하고 있는 무전공의 함정을 면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본격적인 탈전공 시대로의 전환 초입에 다다랐다. 이제는 무전공 선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쟁점에서 벗어나 무전공 선발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물론 무전공 선발 도입과 그 취지가 실현될 때까지의 시차는 피할 수 없다. 다만 무전공 입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시작된다면 그 시차의 간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핵심은 우리학교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그 시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다.

세시봉

똑똑한 시민

황인찬 기자

phillip0503@khu.ac.kr



지구 정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극심한 경제위기를 타파할 구원투수로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됐다. 극우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아르헨티나 기존 정치권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자를 끌어 모았다. 이는 비단 아르헨티나만의 일은 아니다.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정치 현실과 이에 휩쓸리는 국민의 모습, 우리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진 않다.

‘포퓰리즘’은 시간이 지나며 ‘대중영합주의’ 행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정치인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허울뿐인 방안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킨다. 진실을 보진 않고 논점을 흐린다.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한 국민은 매일 쏟아지는 뉴스의 파도에 휩쓸린다. 민주시민으로서 개인의 소신은 정보의 파도 속에 표류한다. 민주주의 정치는 무력해졌고 공적 담론은 공허하게 울리기만 한다. 지금의 정치 현실도 문제지만 화려한 전략에 넘어가는 국민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다. 공화주의는 개인을 무시하고 공동체만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시민적 덕성을 갖춘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데 도구적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68차 유엔무역개발이사회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성공한 국가의 국민은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2023세계행복보고서’의 국민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중 뒤에서 4등이다. 이것이 현 대한민국에 ‘시민적 공화주의’가 대두되는 이유다.

공공선과 개인의 이익은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 성공한 국가의 국민이 행복해지려면 국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치권의 ‘논점 흐리기’에 휘둘리지 않는 ‘똑똑한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정치 현실 개선은 남의 일이 아니다. 시민적 덕성을 가진 개인이 ‘소신’을 갖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학생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고도희 기자

kdhsitory@khu.ac.kr



총학생회부터 학과 학생회까지 많은 학생 자치기구가 학생 사회 개선을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학생회의 역할은 학생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데 있다. 이들에게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신문의 이번 학생회비 운용 현황 취재에 여러 학생회가 참여했지만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었다. 단순 조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회가 취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명성이 강조돼야 하는 학생회비 관련 취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은 아쉽기만 했다.

기자 본인 역시 학생 자치를 위해 회비를 내는 한 명의 학생으로서 취재를 거듭할수록 내 돈, 학생들의 돈이 개인 계좌를 통해 관리된다는 사실이 우려됐다. 투명

하고 합리적인 공금 운용을 위해 학생회 명의 통장을 개설하자는 데에 극구 반대하는 학과의 태도에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실제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운용하더라도 투명하게 과정을 공개하며 단체 명의 통장 발급을 준비 중인 학생회는 빠르고 자신 있게 취재에 응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생회는 답변을 거절했다.

당선 전에는 학생을 위해 일하고 청렴한 학생 사회를 만들겠다는 허리 숙여 한 표를 구하던 학생회의 예상치 못한 모습을 마주하니 놀랐다. 이럴 때일수록 학생들은 각자 속한 학생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며 적극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학생회는 학생 위에서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라 학생과 호흡하며 학생을 대표해 일하는 상생 관계에 놓인 기구다. 모든 학생회가 학생에게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학생회가 되길 바란다. 순간의 비판이 두렵더라도 이를 수용해 밝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학생 사회를 만드는 방향일 것이다.



만평 본심이 다른 학생회?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지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송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